

“불안하지만 믿고 맞아야죠”...병·의원 접종 행렬

만 62세~69세 독감 백신 무료접종 시작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에도, 만 62~69세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되면서 정부의 권고를 믿고 찾은 대상자들이 크게 몰리면서 접종기관은 하루종일 북적였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 지부에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만 62세부터 69세 대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려는 시민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아픈 데 없으면 안 쓰고 공간으로 비워놔야 되죠?”, “60세가 안되는데 온 김에 여기서 유료로 접종 받아도 되는 거죠?”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은 1시 훨씬 전부터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 지부 앞에 길게 줄을 섰고 1층 로비는 접종 전 문진표를 작성하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어르신들로 소란스러웠다.

26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자는 모두 59명. 광주·전남에서도 9명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졌다.

접종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는 게 보건당국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접종이 이익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며 “방역당국과 전문가의 평가를 신뢰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맞는게 되레 안전한 것 같아” 접종기관 하루종일 북적통 500명 분량 3시간만에 동나 유료 접종 젊은층도 눈에 띄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건 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도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다.

이날 만난 이길현(64·광주시 서구 양동)씨는 “올해부터 무료 접종 대상자가 돼 접종을 받으러 왔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 됐지만, 정부에서도 믿고 접종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접종을 마치고 나온 한경태(65·광주시 남구 월산동)씨 부부는 “접종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 자녀들이 걱정을 하긴 했지만, 우린 지병도 없고 오히려 접종을 받는 게 안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료 접종 대상자 뿐 아니라 20~30대 젊은층도 눈에 띄었다.

남편과 함께 문진표를 작성중이던 이화경(30·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성인이 된 후에는 처음 받는 독감 예방 접종”이라며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 차 방문했는데, 코로나도 유행하고 해서 예방접종도 함께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모(29)씨도 어머니와 협회를 찾아 예방접종을 마쳤다. 정씨는 “어머니도, 나도 무료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날도 추워져 늦었지만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다.

접종자들이 몰리며 이날 건강관리협회가 준비한 500명 분량의 독감 예방 백신은 3시간 만에 동났다. 접종 부작용 논란으로 찾은 이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느긋하게 왔던 일부 시민들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독감 접종을 맞기 위해 병·의원을 찾는 시민들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이비인후과는 오전에 24명의 시민들이 찾았고 북구 한 내과에서도 오전에만 30명이 접종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무료 접종 대상자인 62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25만 4669명으로, 이들 중 11만 320명(43.3%)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간이 갈수록 접종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도도 18세 이하 어린이·임신부, 만 62세 이상 주민 등 무료접종 대상자 71만 4000여명 가운데 44만 2000여명(62%)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곽은영 광주시 남구보건소장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접종하고 평소 애용하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 등을 예진 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혈관이 수축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접종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SI 막자” 영산강 방역 26일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농업축산팀 직원들이 건국동 영산강 인근 둔치에서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세들어 살던 집 경매로 전세금 날려 6년동안 광주·전남 1534가구 달해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광주·전남지역 세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 없는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전셋값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지역 세입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촉촉한 주거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김진에 의원이 26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6년여간 광주·전남 1534가구가 세들어 살던 주택 경매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경매가 2351건인 점을 고려하면 65%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광주의 경우 이 기간, 574가구(경매 건

행 건수 851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전남지역에서는 960가구(/ 1500건)가 살던 집에 대한 경매가 끝난 뒤에도 후순위로 밀리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로만 따지면 광주가 67%, 전남은 64%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을 빼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5000건 가운데 80%(3988건)가 보증금 1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라며 집 없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재가동 20일 만에 또 멈춘 한빛원전 5호기

새로 교체한 증기발생기 문제 지역민들 불안감 커져

한빛원전 5호기가 계획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시작한 지 불과 20일 만에 또 다시 멈춰섰다. 원전측은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정비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가동을 중단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빛 5호기는 이날 오전 10시 4분 출력을 높이던 중 증기발생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증기발생기 2대를 바꾸고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부 개선 등 기계 점검·정비를 마친 뒤 발전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못돼 원자로가 스스로 멈춘 것이다.

한빛 5호기는 지난 4월 10일 가동을 멈추고 180일간 제 1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가 지난 6일 발전을 재개했다.

증기발생기 이상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는 게 원전측 설명이지만 문제가 된 증기 발생기의 경우 이번에 새로 교체한 기기 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은 불안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증기발생기 교체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원전 측이 가동을 서두르면서 비롯된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빛원전측이 증기발생기 교체 관련 성능시험을 거쳐 지난 17일 전출력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5호기 운영 계획을 밝혀놓고도 이날까지 전출력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동시험을 진행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한빛원전측은 여태껏 17일까지 전출력에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지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기점검을 마치고 발전을 준비하는 중 갑자기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처음이 아니데, 미리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

고서야 뒤늦게 공지하는 일방적인 행태에 대한 불안감도 팽배하다.

한빛 2호기도 지난해 1월 정비를 끝내고 재가동을 위해 출력을 높이던 중 증기 발생기 문제로 원자로가 멈춰섰다.

한빛 원전측은 “원자로는 현재 안정상태를 유지중이며 방사선 영향은 없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증기발생기는 내부에 성인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지름 1인치 가량)의 가느다란 관(세관 또는 전열관이라 부름) 8000여개로 구성되는데, 원자로를 통과하면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고온·고압의 냉각수(물)로 달궈진 전열관과 냉각수 간 온도 차이로 증기를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전열관에 자칫 균열이 발생하면 경우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원생 정서적 학대 혐의 보육교사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역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A씨는 7살이 채 안되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귀를 잡아당기거나 뒷목, 무릎등을 세게 눌렀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광주지역 모 어린이집에서 학습활동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아동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뒷목, 다리 등을 강하게 누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행위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같은 타자에 앉아있는 다른 아동을 움찔하게 하거나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는 등 해당 아동에게 훈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오해를 살 수 있으나 학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다수 의견 등도 반영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 내건 총선 예비후보 벌금형 선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을 내건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빌딩 지상 3층부터 5층 외벽에 음란하거나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예비후보 인간쓰레기들’이라고 표시하고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에서 따온 여성 나체 그림을 집어넣은 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혐의 장관의 사진을 합성하는가 하면, 이용섭 광주시장의 사진이 표시된 문이 그림을 합성한 현수막을 약 45시간 가량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의 하나로 현수막을 게시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풍자한 내용이 포함된 점에 현수막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